

권력의 식민성과 볼리비아 원주민 사회운동*

김 은 중
단독/강원대학교

Kim, Eun-Joong(2008), La colonialidad del poder y el movimiento social indígena en Bolivia, *Revista Iberoamericana*, 19-1, pp. 29-57.

Nos enfrentamos a problemas modernas para los cuales no hay soluciones modernas. En el Norte global fue desarrollada la teoría política que se aplicó a todas las sociedades. En los últimos 30 años, las grandes prácticas transformadoras vienen del Sur. Tenemos teorías producidas en el Norte y prácticas transformadoras producidas en el Sur que no se comunican. Además, la teoría política tiene como marco histórico la cultura eurocéntrica, que se adapta más a contextos donde esta cultura tiene que convivir con culturas no occidentales, como son las culturas indígenas. Cabe decir que, después de la independencia, el colonialismo del poder ha continuado bajo otras formas, como las del colonialismo social o el colonialismo interno. Por estas razones, no necesitamos tanto de alternativas transformadoras sino de un pensamiento alternativo sobre las alternativas. Mi propósito es el de contribuir con alguna clarificación analítica sobre la relación entre el Estado y los movimientos sociales indígenas, poniendo énfasis en el concepto ‘la colonialidad del poder’.

[colonialidad del poder/ movimiento social indígena/ globalización neoliberal/
estado plurinacional/ Evismo; 권력의 식민성/ 원주민사회운동/
신자유주의 세계화/ 다국민국가/ 예보주의]

* 이 논문은 2006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KRF-2006-323-B00024).

I. 서론

라틴아메리카 정치지형에 좌파가 새로운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다. ‘새롭다’는 수식어는 좌파의 등장이 정당을 통한 대의정치라는 전통적 방식을 통해서가 아니라, 한편으로는, 스스로를 ‘중도좌파’ 혹은 ‘진보’라고 규정하는 정권을 통해서, 다른 한편으로는, 끊임없이 발생하는 새로운 사회운동을 통해서 모습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1990년대 중반 이후 발생하고 있는 라틴아메리카 사회운동은 신자유주의 정책에 저항하기 위한 ‘거리와 광장의 점거’에서부터, 볼리비아, 에콰도르, 아르헨티나, 페루에서 목격했던 것처럼 연속적으로 정권을 붕괴시키는 대중적 반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다.

새로운 사회운동을 통한 라틴아메리카 정치지형의 변동은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실패가 가져온 결과라고 말할 수 있다.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이 정치적 독재에서 민주주의로 이행했던 1980년대를 ‘잃어버린 10년’으로 규정하고, 이를 만회하기 위해 앞서거나 뒤서거나 채택한 신자유주의 정책은, 한편으로는 국내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사회운동으로부터, 다른 한편으로는 저항의 국면에서 대안모색의 국면으로 이행하고 있는 국제적 반(反)신자유주의 연대로부터 양면 공격을 받으면서 완전히 수세에 몰려 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신자유주의의 쇼윈도’로 불릴 정도로 대륙 전체를 우파정권들이 집권하고 있던 라틴아메리카 대륙이 급속도로 ‘좌회전’하게 된 것은 지난 30년간 빈곤은 더욱 심화되었고 불평등은 더욱 악화되었기 때문이다. 경제개혁지표를 0과 1 사이의 숫자로 표시할 때, 0.55이던 1980년의 라틴아메리카 대륙 전체의 평균 1인당 국내총생산액이 3,739달러였던데 비해,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이 채택된 지 20년이 지난 2000년에는 경제개혁지표가 0.83으로 크게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1인당 국내총생산은 3,952달러에 불과했다. 그 사이 빈곤층의 수는 크게 증가하여 대륙 인구의 44%에 이르는 2억 2500만 명에 이른다. 불평등 정도를 표시하는 지니계수는 0.55에 이르러 지구상 최악의 수준을 보인다. 2002년 조사에 따르면 소득 상위 20%의 인구가 전체 수입의 약 55%를 차지하는 데 반해 하위 20%는 고작 4.7%의 수입만을 차지

하고 있을 뿐이다(박정훈, 2007).

‘가난하고 불평등한 민주주의’에 대한 최초의 사회적 저항은 냉전체제 종말의 상징이었던 베를린 장벽이 붕괴된 1989년에 베네수엘라의 수도 카라카스에서 일어났다. 공공요금의 폭등에 분노한 도시빈민들이 대규모 폭동을 일으킨 것이다. 그러나 이때만 해도 라틴아메리카의 고질적인 정정불안이 낳은 베네수엘라 국내의 사건쯤으로 치부되었다. 지역적 사건을 전지구적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한 저항으로 선언한 것은 그 보다 5년 뒤인 1994년 1월 1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발효되는 시점에 터진 멕시코 치아파스주의 사빠띠스따(zapatista)들이었다. ‘새로운 세계질서’의 구축을 통해 사회주의에 대한 자본주의의 최종적 승리를 선언하는 순간에 터진 사빠띠스따들의 봉기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최초의 공세였고, 그 뒤를 이어 아르헨티나의 피켓시위자들(piqueteros)이 등장했으며, 프랑스와 한국에서는 노동자와 시민들이 대규모 파업을 일으켰고, 1999년 시애틀 시위로 이어지면서 대륙적-국제적으로 수준으로 파급되었다.

치아빠스 봉기 이후, 그리고 최근에 볼리비아와 에콰도르에서 주목할 만한 정치적인 변화들이 발생하면서 라틴아메리카 안팎에서 원주민들의 사회운동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이러한 관심의 원인은 원주민운동이 정치적으로 즉각적인 파장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적 구성원들의 행동에도 영향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며, 더 나아가 점차 많은 나라에서 스스로를 민주적이라고 규정하는 정권의 안정성을 위협하고 통치능력(gobernabilidad)에 불만을 표시하는 사회운동으로 확산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원주민운동을 포함하여 전반적인 라틴아메리카 사회운동을 바라보는 정치 이론은 사회운동이 보여주는 정치적 실천과 거리가 있다. 사회운동을 분석하는 이론과 구체적 실천 사이에 괴리가 발생하는 주된 이유는 북쪽(el Norte)에서 만들어진 이론으로 남쪽(el Sur)에서 일어나고 있는 실천을 분석하기 때문이다. 사실상, 최근 30년 동안에 주목할 만한 사회 변화를 동반하는 실천적 운동은 모두 남쪽에서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쪽에서 생산된 이론적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현재의 상황을 패러다임 전환의 시기라고 규정하는 것은 근대문명이 노출한 문제들에 대해 근대적 해결책을 제시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¹⁾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근대적 문제설정을 벗어나서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며, 유럽중심적 대안을 모색하는 단선적 사유에서 벗어나 대안에 대한 대안적 사유, 비(非)유럽중심적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원주민 사회운동과 관련하여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으나, 21세기 라틴아메리카가 나아가야 할 지향점을 설정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될 두 가지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는 원주민 사회운동과 국민국가의 관계 형성의 토대를 이루는 ‘권력의 식민성’(la colonialidad del poder)의 문제이며, 둘째는 정치적 독립 이후에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식민지적 권력 기반’(colonial power matrix) 내에서의 민주주의에 관한 문제이다. 이를 위해 라틴아메리카 전반의 원주민 문제로부터 출발하여 안데스 지역의 원주민 사회운동과 병행하여 볼리비아의 원주민 사회운동을 살펴볼 것이다.

II. 원주민에 대한 이해와 권력의 식민성(colonialidad del poder)

원주민의 의미가 태어난 장소나 가계(家系)를 뜻하는 것일 때 원주민을 가리키는 여러 가지 표현들은 큰 차이점을 갖지 않는다.²⁾ 그러나 이러한 표현들이 ‘백인’과 ‘유럽인’과의 관계에서 인식되는 경우는 달라진다. 즉 원주민이라는 표현에는 식민지 기간의 역사적 경험이 ‘권력 기반’으로 자리 잡고 있다.

첫째, 식민지배자와 피지배자 사이에 존재하는 인종차별주의이다. 그전까지는 존재하지 않았던 ‘인종’이라는 개념은 정복에 의해 강제된 지배 관계를 정당화하기 위해 만들어졌고 새로운 지배체제의 토대가 되었다. 역사에서

-
- 1) 물론 현재의 상황을 근대적 패러다임 전환의 시기로 보느냐 패러다임의 완성을 위한 지속의 시기로 보느냐에 대한 견해는 평자마다 다르다. 그러나 발전주의가 내건 진보의 구호를 무색하게 하는 불평등의 심화, 대규모 이주, 생태파괴, 핵전쟁을 통한 인류 공멸의 위기감 등은 좌우를 막론하고 현재의 상황을 패러다임 이행의 시기로 보는 데 동의한다고 생각된다.
 - 2) 원주민을 가리키는 표현은 원주민(indigena), 토착민(aborigen), 출생인(nativo), 토종인(original) 등이 있다. 이러한 표현들은 공통적으로 출생/거주 장소와 역사적 시간성을 관련짓는다. 그러나 인디오(indio)라는 표현은 인종적 의미가 강조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발견’이라는 이름으로 기록된 아메리카 정복은 식민자와 인디오라는 새로운 사회적 지배 체제를 탄생시켰고, 18세기 이후 ‘백인’과 ‘유럽인’을 척도로 ‘인디오’, ‘흑인’, ‘혼혈인’(mestizo)이라는 사회적 위계질서가 등장했다.³⁾

둘째, 새로운 노동착취체제의 등장이다. 유럽에서 노동에 대한 지배가 노예제와 봉건제를 거쳐 임금노동으로 전환되었던 반면에, 라틴아메리카에서는 모든 종류의 노동에 지배와 착취 형태(노예, 반(半)농노, 소(小)생산자, 임금노동, 자본주의 등)가 동시에 존재했다. 지배와 착취를 통해 생산된 생산물들은 자본의 헤게모니를 중심으로 세계 시장에 공급되었다.

셋째, 유럽중심주의(eurocentrismo)가 새로운 생산양식뿐만 아니라, 상상력과 지식 그리고 기억을 통해 주체성을 통제하는 새로운 척도로 등장했다. 다시 말해, 유럽중심주의는 새로운 주체성, 상호주체적 관계에 있어서 새로운 권력기반이 되었다. 유럽중심주의는 시공간 개념을 새롭게 개조하여 인간의 염원이 실현되는 황금세기를 과거에서 미래로 옮겨 놓음으로써 현실적 삶을 설명하는 컨텍스트가 되었다. 현실의 구체적 삶이 텍스트라면, 근대성이라 불리는 시대적 징표로서의 유럽중심주의는 텍스트를 설명하는 컨텍스트인 셈이다. 이것은 텍스트와 컨텍스트의 전도(顛倒)를 의미하는 것이며, 유럽 식민주의의 세계적 확장은 유럽중심주의가 세계적 헤게모니를 장악했음을 의미한다.

넷째, 집단적 권위의 대리인으로 근대적 국민국가가 등장했다. 독립 이후 라틴아메리카에 근대적 국민국가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원주민은 인종적으로 열등한 존재로 분류되었고 국민국가 구성원이 갖는 모든 사회적 권리를 박탈당했다(Anibal Quijano, 2000; 영, 2005).

아메리카의 정복으로 시작된 이러한 권력기반은 18세기부터 전세계적으로 지배적인 담론이 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반식민주의 투쟁의 성과로 권력의 통제가 상대적으로 탈중심화되었다고 하지만 유럽중심주의는 여전히 지배 담론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⁴⁾ 오히려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인해 전

3) 사실상 인디오라는 용어는 그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아스떼카, 마야, 잉카, 아이마라, 마뿌체 등 종족을 구분하는 용어가 있었을 뿐이다. 이점은 유럽인들도 마찬가지이다. 새로운 사회적 위계질서가 성립하면서 종족 간의 차이는 사라지고 유럽인·백인과 구별되는 하위주체로서 인디오, 흑인, 메스티소가 등장한 것이다.

4) 20세기 이후 ‘유럽적’, ‘유럽중심주의적’이라는 표현은 물리적·지리적 의미보다 여전히 유효

지구적으로 권력의 재집중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라틴아메리카에 있어서 원주민에 관한 논의는 권력기반의 식민성과의 관계에서만 의미를 가지며, 이 관점을 벗어나서는 의미를 상실한다. 예를 들어, 아시아나 아프리카의 경우 식민지로부터 독립한 이후 유럽중심적인 외생변수에 의한 문화적 신(新)식민주의를 우려하고 있다면, 라틴아메리카는 내재적-권력구조적 신식민주주의의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이는 19세기 초 스페인과 포르투갈로부터 독립을 쟁취한 세력은 원주민들이 아니라 식민지 지배계층의 후손들이었다는 사실에서 발생한다. 엄밀하게 말해서 라틴아메리카의 독립과 근대적 국민국가의 형성 과정은 식민지 지배의 연속이었을 뿐이며, 독립 이후 라틴아메리카 전체를 끊임없이 괴롭힌 정치적 정당성의 확보와 문화적 정체성의 확립은 이러한 역사적 현실을 감추기 위한 수단이었다.

III. 권력의 식민성과 국민국가의 형성

식민지로부터의 독립한 아메리카는 독립된 국가와 식민지적 사회가 절속된(articulated) 독특한 역사적 모순을 경험하게 된다. 이점은 영국의 지배로부터 벗어난 미국이나,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지배로부터 독립한 라틴아메리카에 공통된 상황이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에 새로운 국가의 국민성은 국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사회적 구성원의 국민성과 일치했고, 국민국가의 형성 과정에서 권력의 식민성에 종속된 흑인과 원주민은 소수자의 위치를 차지했다. 이와 비교하면, 라틴아메리카 경우는 권력을 차지한 백인과 유럽인은 소수였고, 원주민, 흑인, 메스티소가 압도적 다수를 차지했다. 하지만 독립 이후에도 원주민들 대부분이 노예상태를 벗어나지 못했고, 근대성의 과정에서 최초의 사회적 혁명을 일으켰던 아이티의 경우를 제외하면 흑인들 역시 같은 상황에 놓여 있었다. 다시 말해, 국가형성 과정에서 법적이고 사회적으로 참여가 제한되었으며 정당한 몫을 인정받지 못했다. 새로운 국가는 식민지적 권력으로부터 독립했지만 사회적으로는 권력의 식민성 구조가

한 권력기반의 식민성과의 맥락을 의미한다.

그대로 잔존했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새로운 국가의 국민들은 누구라고 말할 수 있는가? 새로운 국민적 정체성을 부여받아 오늘날 ‘멕시코인’, ‘페루인’ 혹은 ‘브라질인’이라고 불리는 ‘유럽인’ 혹은 ‘백인’들인가, 아니면 원주민, 흑인, 메스티소인가? 백인/유럽인들은 남미 남부 지역(칠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을 제외하면 모든 지역에서 매우 소수였다. 칠레의 경우 대부분의 원주민들이 식민화되지 않았고, 수적으로 거의 말살되거나 식민화되기까지 오랫동안 저항했으며,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의 원주민들도 비슷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아메리카에서 새로운 독립 국가는 근대적 국민국가로 탄생하지 못했다. 다시 말해, 국민적이지도 않았고 민주적이지도 않았다. 이러한 상황은 특히 라틴아메리카의 경우에 “뒤쳐진 식민 근대성 안에 포스트식민을 남겨 두면서 식민 조건과 탈식민 조건을 상대적으로 명확히 구분하는 경향이 아니라, 정치적 시간과 문화적 시간이 공존하는 경향으로 존재한다”(영, 2005: 339). 이런 이유로 19세기 독립 이후부터 ‘라틴아메리카적인 것’(lo latinoamericano)을 규정하기 위한 제안들이 계속 존재해왔고, 이러한 제안들은 존재론적(ontológico)이고 정치적인 과제로 인식되었다. 브라질적 특성(brasileñidad), 멕시코적 특성(mexicanidad), 페루적 특성(peruanidad) 등 국민적이고 지역적인 존재를 찾아내려고 노력했고 이러한 노력의 수렴점은 라틴아메리카적 특성의 탐색이었다. 이런 과정에서 역설적으로 지배 권력이 무시했던 원주민의 뿌리를 이상화하기도 했고, 독립의 과정에서 단절을 시도했던 이베리아 왕국의 전통을 국민국가를 통합하는 원리로 내세우기도 했다(Paz, 1984: 11-32). 이런 모순적 상황은 옥파비오 빠스나 까를로스 푸엔테스 등 라틴아메리카의 많은 지식인들이 비판했듯이 ‘법적으로 규정된 현실’(realidad legal)과 ‘정치적 현실’(realidad política) 사이의 커다란 괴리를 드러냈다.

국민국가는 차이들과 탈구들을 조직하고 해결하는 통합적 단일성으로 등장했다. 국민적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일단의 인류학자들과 지식인들이 지역적이고 종족적인 특이성을 복구하려고 시도하기는 했지만, 국민적 정체성의 토대가 되는 국민적 문화를 형성하는 것은 담론의 작업 목표였고 역사적 사료들을 정리하는 실험실로부터 얻어질 수 있는 것이었다. ‘페루의 현실

에서 원주민의 위치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를 숙고했던 호세 까를로스 마리아떼기(José Carlos Mariátegui)와 호세 마리아 아르게다스(José María Arguedas), 브라질의 지역성과 종족성이 국민적 혼종성으로 합류한다고 주장한 질베르투 프레이레(Gilberto Freyre)와 호베르투 다 마따(Roberto Da Matta), 항구도시와 내륙의 역할에 대한 토론을 통해 아르헨티나의 국민적 정체성을 추구한 에세끼엘 마르띠네스 에스뜨라다(Ezequiel Martínez Estrada)와 호세 에르난데스 아레기(José Henrández Arregui) 등의 작업이 이러한 노력을 보여준다.

존재론적 관점에서 국민적 정체성을 확립하려는 시도는 20세기 중반에 이르러 세 갈래로 분화되었다. 첫 번째 갈래는 민중주의(populismo)였다. 대표적인 예로 브라질의 바르가스(Vargas)와 아르헨티나의 페론(Perón)은 민중주의를 통해 민중적-원주민적-혼혈적인 것의 회복과 스페인적-포르투갈적인 것의 회복을 합류시킴으로써 절충적인 방식으로 국민적 통합을 시도했다. 민중주의는 절충적 성격에서 기인하는 이데올로기적 우유부단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곧잘 형이상학적-낭만적 개념에 의지하곤 했다. 즉 국민국가의 모든 구성원들이 단 하나의 동질적인 문화에 속한다고 주장했다. 토속적인 것에 대한 암시, 역사적 기념물과 인물 동상에 대한 찬양, 종교적 제의, 각 사회에 차별적 기호의 제정 등은 민중주의를 떠받치는 토대로 작용했다. 이런 맥락에서 민중주의는 인위적이고 가공적인 근대적 국민국가의 형성에서 제외된 사회계층을 포섭하기 위한 정치적 시도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갈래는 경험적 연구에 바탕을 둔 새로운 패러다임의 산출이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1950년대 라틴아메리카 사회과학의 성장이었으며, 가장 영향력 있는 모델은 발전주의이론과 종속이론이었다. 국가의 근대화는 전근대적 전통과 사회문화적 이질성이라는 장애물을 제거하고 국민적 정체성을 확보하는 명제로 등장했다. 발전주의를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는 종속이론은 종속에 대한 연구를 통해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이 갖고 있는 해악이 종속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경제적이고 문화적으로 독립한 국민중심주의적 발전을 이룩함으로써 이러한 해악들로부터 벗어나기를 기대했다. 마지막 세 번째 갈래는 예술적이고 문학적인 전위주의였다. 예술적이고 문학적

인 전위주의는 라틴아메리카의 상징적 창조물과 기호(gusto)를 국제화하려고 시도했으며 유럽의 문화적 혁신에 동조(同調)하기를 원했다(García Canclini, 2002: 35-43).

이러한 세 갈래의 시도들의 중심에는 공통적으로 ‘국민적인 것’(lo nacional)이 자리 잡고 있었으며, 대표적인 구호로는 브라질의 ‘인종적 민주주의’(democracia racial)와 멕시코의 ‘동화주의’(asimilacionismo)를 들 수 있다.⁵⁾ 그러나 1968년 멕시코 플라텔롤코(Tlatelolco) 광장에서 발포 사건이 일어나고 70년 말에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에 군사정권이 들어서면서 문화적 정체성을 통한 통합의 시도는 정치적 구호에 불과했음이 드러났다.

독립 이후 국민주의(nacionalismo)의 형성이 보여주는 파행적 결과는 유럽 지배에서의 해방이 민중들이 자유를 되찾고 어떤 의미에서든 자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 독립은 유럽의 백인 정착민이자 지배자였던 크리오요(criollo)들이 성취한 식민 부르주아 혁명이었다. 이러한 모순은 19세기 중반 이후 국가의 성격과 시민권의 문제로 드러났다. 유럽의 모델을 모방한 자유주의자들에게 유럽의 자유주의 혁명의 담론과 이를 이식하려는 라틴아메리카의 구체적인 현실 사이의 괴리는 확연한 것이었다. 이렇게 원주민 문제는 근대적 국민국가의 출발 지점에서부터 논쟁의 핵심으로 떠올랐고 공화국 건설의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인종’의 개념은 개별적 주체의 물질성(원주민, 흑인, 백인 등)에 적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의 물질성(노예, 반농노 등)에도 적용되었다. ‘열등한 인종’인 원주민에게, 자유주의적 혁명의 과정을 거쳐 유럽에서 가능했던 것처럼, 자유 시민의 권리를 부여할 수 없다는 주장은 지배자들의 사회적 이해를 보호하기 위한 구실이었을 뿐이다. 라틴아메리카에서 원주민 문제가 자유주의 이념과 정치적 현실 사이의 불화의 근원으로 변한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따라서 원주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로 얽혀 있는 문제들이 동시에 해결되어야만 했다. 첫째는 국민국가 내의 정치적 관계의 탈식민화이고, 둘째는 사회적 노동착취의 조건을 근본적으로 전복시키는 것이며, 셋째는 문제해결의 출발점으로서 사회적 지배관

5) 호세 바스콘셀로스의 ‘우주적 인종’(raza cósmica)은 정치적 동화주의를 뛰어넘어 철학적 형이상학을 제시하려는 시도였다(김은중, 1999: 220-242).

계의 탈식민화이고, 이를 위해서 사회적 계급화의 기본적이고 보편적 형태인 ‘인종’ 개념을 삭제하는 것이다. 달리 말한다면, 원주민 문제의 효율적인 해결은 식민지적 권력기반을 총체적으로 전복시키고 해체하는 것이다. 원주민 문제는 라틴아메리카의 역사적 발전을 위한 손과 발을 묶어 놓은 채 아직까지 풀리지 않고 있는 매듭이며, 국민, 정체성, 민주주의 사이에 불일치가 발생하는 근원적인 이유이기도 하다.

다른 한편, 문화의 관점에서 라틴아메리카의 근대적 국민국가의 형성과정을 바라보면, 독립은 유럽중심주의의 헤게모니를 더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유럽에서는 사유와 실천의 양면에서 근대성이 추진된 반면에, 라틴아메리카의 근대성은 주체성과 ‘진보’의 이데올로기를 추종하기에 몰두했으며, 더구나 이러한 작업이 지배 그룹과 소수의 지식인 중간 계층에 한정되었기 때문이다.⁶⁾

IV. 원주민 운동과 권력의 식민성

독립을 쟁취한 공화국과 식민지 권력기반이 지속되는 사회라는 모순적 양면성이 라틴아메리카의 독특한 정치적 현실이라면, 또 다른 모순은 이러한 상황에서 근대성과 민주주의를 성취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자문한다면, 식민지적 권력기반을 붕괴시키지 않고도, 즉 혁명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유럽의 자유주의자들이 내세운 근대성과 민주주의를 달성하는 것이 가능한가? 이에 대한 역사적 대답은 이것은 ‘정치적 환영’(espejismo político)에 불과했

6) 소우자 산투스의 견해에 따르면 서구 근대성을 형성하는 두 가지 지식체계는 ‘규범으로서의 지식’(conocimiento-regulación)과 ‘해방으로서의 지식’(conocimiento-emancipación)인데, 근대 세계체제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규범으로서의 지식이 강화되고 해방으로서의 지식은 약화되었다. 규범으로서의 지식이 객관성을 근거로 현실에서 질서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해방으로서의 지식은 사회적 권력관계의 인식과 이에 대한 비판이다. 따라서 규범으로서의 지식에서 안다는 것이 무질서→질서를 의미한다면, 해방으로서의 지식에서는 식민주의→(사회적 소수자들의) 연대(solidaridad)를 의미한다. 이것은 지식의 규범성과 해방성의 관점에 따라 현실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과 그 문제점의 해결을 통해 도달하는 귀결점이 확연히 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Sousa Santos, http://www.ces.fe.uc.pt/bss/documentos/critica_de_la_razon_indolente.pdf).

다는 것이며, 이 문제는 스페인 식민주의가 패배한 이후 거의 2세기 동안 라틴아메리카 정치적 논쟁의 중심을 차지했다.⁷⁾ 라틴아메리카에 적용하고자 했던 자유주의적 민주주의의 패러다임은 유럽 부르주아 사회의 패러다임과 별개이거나 심지어는 반대였다. 유럽 부르주아 사회의 토대가 되는 자유민주주의에서 사회적 권력 관계는 자본의 표현으로 구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생산과 수입 자원의 분배, 조직과 대의제도에 대해 상대적으로 광범위한 영역에 있어서 분배를 우선시하는 민주주의의 표현이었다. 유럽의 자유민주주의는 이러한 분배의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자유주의 부르주아 혁명의 결과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라틴아메리카는 그러한 과정을 전혀 경험하지 못했다. 근대적 주체에 의해 성립되지 못한 라틴아메리카의 자유민주주의는 ‘우파의 사회’(sociedad de derecha)와 결합된 ‘법의 국가’(Estado de derecho)였던 셈이다. 즉 우파(derecha)가 곧 법(derecho)이 되는 정치적 환영이 지배하는 현실이었다.⁸⁾

원주민 동화정책은 식민지적 권력기반을 유지하면서 인디오의 주체성을 유럽화시키는 유일한 방법으로 등장했다. 그리고 유럽화는 곧 근대화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다. 주체성의 형성이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인디오를 유럽화시키는 것만이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는 방법이였다. 더 손쉬운 방법은 원주민을 말살하는 것이었고, 이러한 말살정책은 미국을 비롯하여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칠레에서 실천되었다. 반면에, 멕시코, 중앙아메리카와 안데스 지역에서는 문화적이고 정치적으로 동화정책을 선택했다.⁹⁾ 지역적으로 이런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첫째, 주민을 구성하는 원주민의 비율이며, 둘째 식민지 시기 지배와 착취의 체제에서 사회적으로 혼련

7) ‘환영’(espejismo)이란 라캉의 정신분석학에서 상상계를 의미한다. 라캉은 ‘거울단계’라는 용어를 상용하여 주체가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바라보고 그 거울 이미지에 따라 ‘상상적’으로 자아를 구성하는 단계를 설명한다. 그의 설명에 의하면 거울에 비친 자아는 주체의 진정한 본질이 아니며 오히려 주체를 속이는 기만적 환영이다. 독립 이후 라틴아메리카의 공화국 형성 과정에서 대다수의 민중을 주체로 인정하지 않은 채 유럽의 국민국가 체제를 모방한 것은 라캉의 상상계에 속하는 ‘정치적 환영’에 불과했다.

8) 여기서 우파(derecha)와 법(derecho)은 일종의 언어적 펀(fun)이다. 스페인어로 ‘데레초’와 ‘데레차’라는 발음의 유사성이 동떨어진 의미의 유사성으로 연결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9)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원주민 동화정책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김기현, 2005:94-100).

된 노동력을 유지하고 있느냐 없느냐는 기준이 달랐기 때문이다. 멕시코와 페루가 스페인 식민지 지배의 거점이었던 반면에, 남미 남부는 18세기 중반까지 변방 지역에 머물러 있었다. 혼련된 노동의 통제라는 측면에서 공화국 형성 시기부터 정치적 담론의 의제로 떠오른 원주민 동화정책은 특히 19세기 말부터 강조되기 시작했고 20세기 내내 지속되었다.

문화적 동화정책은 국가에 의해 추진된 제도화된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동화정책은, 한편으로는 공교육을 통해 인디오들을 지배자의 문화에 익숙하도록 만드는 것이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종교기관과 군사기관을 통해 노동을 지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런 양면적 방식을 통해 인디오들을 비(非)인디오화시킴으로써 공화국의 구성원으로 만드는 것이며 동시에 ‘국민적 문화’라는 통합적 개념을 부여하려고 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동화정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도 인디오에 대한 차별과 소외는 끊임없이 계속되었다. 그리고 식민지적 권력기반은 비(非)백인 주민들이 근본적인 사회적 갈등을 치유하지 않은 채 공화국의 시민으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그대로 유지되었다.

원주민운동은 라틴아메리카 역사를 ‘전체사’와 ‘문제사’로 바라보는 핵심이다.¹⁰⁾ 페르낭 브로델은 이 두 가지 관점을 결합하여 역사를 바라보았고, 이를 통해 세계체계분석을 시도했다. 세계체계 분석을 위한 유용한 도구로서 브로델이 말하는 시간개념인 ‘장기지속’은 역사를 바라보는 중층적 시간이다(백승욱, 2006: 49-76).¹¹⁾ 원주민운동은 라틴아메리카 역사를 중층적 시간 개념인 장기지속으로 바라보게 한다. 원주민운동은 최근의 신자유주의 공세에 대한 원주민들의 생존권 요구라는 미시적 사건이 아니라, 신대륙 발견과 더불어 형성되기 시작한 식민지적 권력기반에 대한 장기지속적이고 근

10) ‘전체사’와 ‘문제사’란 페르낭 브로델이 주장하는 역사관에서 비롯됐다. ‘전체사’란 역사의 대상을 분과학문 중심의 영역별로 분할하여 서술할 수 없다는 것이며, ‘문제사’란 어떻게 역사를 탐구하느냐에 따라 역사를 재구성해서 쓰게 된다는 것이다.

11) 세계체계 분석은 라틴아메리카에서 생산된 중속이론의 영향을 받아 중심-주변의 도식을 아메리카 발견의 시점, 즉 ‘대서양 상권’(el circuito comercial del Atlántico)이 등장하는 시점까지 확장했으나 근대성과 식민성을 동일한 관점에서 바라보지 못하는 한계를 보인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근대세계체계라는 개념 대신에 근대적/식민지적 세계체계라는 개념을 사용해야 한다. 근대세계체계가 근대성과 식민성을 개별적이고 파생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근대적/식민지적 세계체계는 식민성을 근대성의 구성요소로 인식한다.

본적인 비판이다. 이러한 인식은 사빠띠스따들의 첫 번째 선언문에 잘 드러난다.

우리는 500년에 걸친 투쟁의 산물입니다. 처음에 우리는 노예제에 반대해 싸웠습니다. 독립 전쟁 때는 스페인에 대항해 싸웠고, 다음에는 북아메리카 제국주의에 흡수되지 않으려고 싸웠으며, 그 다음에는 우리 헌법을 선포하고 우리 땅에서 프랑스 제국을 쫓아내기 위해 싸웠습니다. [...] 우리는 지금껏 우리를 총알받이로 사용해 우리나라의 부를 약탈해 가려는 세력에 의해 가장 기초적인 것조차 거부당했습니다. [...] 그러나 오늘 우리는 말합니다. 이제 그만!이라고.” (부사령관 마르코스, 2002: 89-90).

원주민운동이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시작인 15세기 말부터 시작된 것이라는 사빠띠스따들의 선언은 원주민 출신인 에보 모랄레스(Evo Morales)가 원주민운동을 통해 볼리비아 대통령으로 당선된 뒤 국민들에 말한 연설문에서도 동일한 공감대를 형성한다.

우리는 우리 역사에 대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투쟁했는지 기억할 수 있습니다. 뚜빱 까따리는 뚜완뎨수요를 수복하기 위해 싸웠고, 시몬 볼리바르는 통일된 아메리카를 위해 싸웠으며, 체 게바라는 좀 더 평등한 세상을 위해 싸웠습니다. 이러한 민주적이고 문화적인 투쟁, 이러한 문화적이고 민주적인 혁명은 뚜빱 까따리로부터 시작되어 체 게바라로 이어져온 투쟁의 일부분입니다. 우리는 이 나라에 평등을 완수할 때까지 계속해서 투쟁할 것입니다 (Morales, 2006).

라틴아메리카 대륙에서 최초로 원주민 출신이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는 역사적 사건은 500년을 지속해온 식민지적 권력기반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정복 이후 3세기가 지나고 공화국이 성립되는 과정에서 원주민들은 인종주의 개념인 ‘인디오’였고, 19-20세기 동안에도 이러한 정체성은 변하지 않고 거의 ‘자연스럽게’ 유지되었다. 마리아떼기가 지

적했듯이 독립 이후에도 라틴아메리카에 널리 퍼져 있던 식민지적 권력기반의 특유한 조건들인 봉건주의의 존속과 원주민에 대한 착취는 여전했다는 것이다.

1. ‘과두제 국가’(Estado oligárquico) 시기의 원주민운동

오늘날의 원주민운동의 씨앗은 과두제 국가의 위기의 과정에서 잉태되었고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인해 본격화되었다. 과두제 국가의 지배 하에서 대부분의 원주민들은 영지에 소속된 농민이었다. 이것은 원주민의 사회적 신분이 노예거나 농노였음을 뜻한다. 일부 도시에 거주했던 원주민도 하인으로 일했다. 이런 사회제도가 유지되었던 이유는 국민국가 형성 시기부터 원주민들이 끊임없이 토지를 빼앗겼기 때문이다. 식민지 시기 동안에 스페인 국왕은 엔꼬미엔다(encomienda) 제도를 철폐하는 대신에, 원주민을 통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원주민 거주 지역을 정하여 거주와 경작을 위한 토지를 인정하였다(이성형, 1999: 75-97). 그러한 토지의 면적은 지역에 따라 달랐지만, 지역을 막론하고 결코 작은 면적이 아니었다. 페루의 원주민 토지는 광대했고 볼리비아의 원주민 경작지는 이 보다 더 넓었다. 원주민들의 토지 수탈이 다시 시작된 것은 19세기 말부터 미국의 자본가들이 광산과 대농장을 점유하기 시작하면서부터였고 1930년대까지 계속되었다. 이 과정에서 소위 과두제 국가 체제는 강화되었다. 멕시코 혁명은 과두제 국가 권력에 대한 원주민-농민의 저항이었다.

멕시코 혁명(1910-1927년)과 볼리비아 혁명(1952년)은 대토지 영주와 부르주아가 결합된 지역적-국가적 권력 구조를 분산시킴으로써 농노 혹은 반농노 신분의 원주민들을 해방시켰다. 페루에서는 조직된 농민들의 대규모 압력에 굴복하여 원주민들에게 경작지를 재분배하는 토지개혁(1957-1969년)이 실시되었다. 그 결과, 노예나 농노 상태의 원주민들이 토지를 갖게 됨으로써 임금노동과 상업 활동이 확대되었다. 노예/농노 노동에서 임금노동으로 전환되는 과정은 라틴아메리카 사회의 급격한 도시화, 산업생산의 증가와 국내 시장의 확대, 새로운 도시-부르주아 집단의 형성과 맞물린 사회구조의 변화,

전문직업인과 지식인으로 구성된 중간계층의 등장 등의 변화와 관련되어 있다. 이런 복합적 변화들은 농촌 인구가 도시로 대량 이주하는 결과를 가져왔다.¹²⁾

원주민/농민들이 명목상 공화국의 시민으로 편입되는 과정은 라틴아메리카의 국민국가가 상대적으로 근대화되는 과정으로 표현할 수 있으나, 여전히 후견인 체제(sistema de clientelaje)와 정치적 개입의 구조 속에 머물러 있었을 뿐 직접적인 대의(표)성을 획득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졌다. 이러한 과정은 안데스 지역의 국가들 사이에서도 차이점을 보였다. 원주민의 시민화 과정이 가장 일찍, 가장 빠르게 그리고 가장 광범위하게 진행된 것은 페루였다. 페루의 원주민들은 인디오라는 인종적 정체성에서 벗어나 시민으로 이동했으며, 임금노동과 시장으로 편입되었다. 이러한 현상을 ‘출로화’(cholificación)라고 부른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페루 사회의 변화 과정에서 주된 역할을 담당한 집단이 바로 ‘출로’(cholo)였다.¹³⁾ 출로들은 1960년대 말경 라틴아메리카에서 가장 광범위하고 강력한 농민 운동을 주도하였고 그 결과 농촌의 대지주들의 권력을 분열시켰다. 농민운동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후안 벨라스코 알바라도(Juan Velasco Alvarado) 군사 정권은 대대적인 개혁 정책의 일환으로 토지 개혁을 단행했다.¹⁴⁾ 그들은 도시의 산업노동자가 되거나 상업에 종사하였고 노조를 결성하여 노동운동을 전개했다. 그들의 압력은 입법부에도 영향력을 행사했고, 그 결과 노동임금에 대한 협상력을 향상시켰다. 또한 모든 수준의 교육

12) 이런 맥락에서 라틴아메리카의 원주민-농민이 도시의 임금노동자로 변화하는 과정은 유럽에서 15세기 말부터 세 차례에 걸쳐 대규모로 진행된 엔클로저(enclosure) 운동과는 유사하면서도 다르다. 유럽의 엔클로저 운동은 대지주와 귀족들이 농민들을 토지로 쫓아내고 양모 산업으로 전환함으로써 토지를 잃은 농노들이 도시노동자로 전락한 경우라면, 라틴아메리카의 경우 원주민/농민들이 공동토지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지주와 귀족들이 노동력의 부족을 메우기 위해 노예/농노 신분으로 착취하던 원주민들을 임금노동자로 사용한 것이기 때문이다.

13) 출로는 농촌의 원주민/농민 공동체를 떠나 도시로 이주해 주류 사회의 문화를 접하고 교육을 받은 원주민을 가리킨다. 이 과정에서 인종적-사회적-문화적으로 메스티소가 되거나, 이로 인해 원주민 고유의 문화적 정체성이나 삶의 양식을 상실한 사람을 의미한다.

14) 벨라스코는 라틴아메리카 역사상 유례없는 농업개혁을 실시하여 지주계급을 해체하고 원주민 언어인 케추아(quechua)어를 국가 공식 언어로 채택했으며 1780년 원주민 봉기를 일으킨 뚜팍 아마루 2세(Tupac Amaru II)를 페루의 국가 상징으로 삼았다. 또한 ‘인디오의 날’(Día del Indio)을 ‘농민의 날’(Día del Campesino)로 바꾸었다(우석균, 2007: 7-17).

기관에도 파고들어 그들의 주장을 전파했다. 그들이 페루 대도시 주변으로 이주하면서 도시 인구의 70%이상을 차지하게 되었고 모든 분야에서 변화를 만들어가는 주축이 되었다.

출로가 사회계층에서 정치계급으로 변화하게 된 계기는 군사정권이 출로의 젊은층, 특히 대학생과 젊은 지식인 그룹과 부딪히면서 출로의 사회적-문화적-정치적 발전을 가로막고 분열시키면서였다. 특히 모랄레스 베르무데스(Morales Bermúdez)가 집권한 군사정권 2기에 들어서면서 스탈린주의와 마오주의의 교의를 흡수한 개혁적 그룹을 억압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고, 1980년대 초부터 무장단체인 ‘빛나는 길’(Sendero Luminoso), ‘뚜썩 아마루 혁명운동’(Movimiento Revolucionario Tupac Amaru, MRTA)이 등장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무장단체와 이를 진압하기 위한 군대가 충돌하면서 가장 많이 희생된 사람들은 완전히 출로화되지 못한 원주민 농민들이었다. 페루에서 원주민/농민이 출로가 되는 현상은 원주민 정책이 가져온 역설적 결과를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즉 출로화 현상은 ‘원주민 비율이 안데스 지역의 다른 국가들보다 더 높은 페루에서 오늘날 중요한 원주민운동이 일어나지 않는 반면에, 에콰도르, 특히 볼리비아에서는 더 영향력 있는 원주민운동이 발생하는가?’라는 질문에 대답을 제시한다.

2.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원주민운동

1970년대 중반 이후 라틴아메리카에 적용되기 시작한 신자유주의 정책의 결과는 사회적 양극화의 심화, 국가 기능의 약화와 여기서 비롯된 초국가주의(transnacionalismo),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에 대한 재검토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라틴아메리카 원주민운동 역시 신자유주의 정책이 도입되면서 과두제 국가 시기와는 또 다른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다.

첫째, 신자유주의는 발전 과정에 있던 생산 구조를 빠르고 전면적으로 붕괴시키면서 실업, 불안전 고용, 사회적 양극화를 심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사회의 모든 분야, 특히 노동자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사회적 재분류’(reclasificación social)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사회 모든

분야의 구성원들의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회적 계급으로 표현되던 정체성이 ‘종족적’, ‘지역적’, ‘주거단위별’로 분류되거나 ‘비정규직’, ‘빈곤층’, ‘극빈층’ 등으로 분류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농촌의 원주민들은 계급으로서 ‘농민’으로 분류되기보다는 종족적 기준에 따른 원주민으로 분류된다.

둘째, 혁신적 통신 수단의 발달에 힘입어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원주민 사회에도 급격한 탈영토화 현상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원주민들이 스스로를 바라보고 규정하는 시각도 ‘의존모델’이라는 익숙한 관점에서 벗어나고 있다. 원주민이라는 용어는 더 이상 문명에서 벗어나 있는 존재를 뜻하지도 않으며 원주민 내부의 다양한 문화적 층차를 수렴하는 총체적 개념도 아니다.

셋째는 앞의 경우와는 상반되는 상황으로 ‘새로운 영토성’(neoterritorialidad)의 등장이다. 세계화는 국가 기능의 약화, 즉 탈국민성 혹은 ‘초국가성’(trans-nacionalidad)를 초래하고, 이로 인한 민영화 현상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억압받고 소외된 원주민들은 국가 없이, 국가에 대항해 살아가는 방법을 찾아내야 할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운 영토성 개념과 결부되어 국가의 재편에 대한 요구로 ‘다국민국가’(Estado plurinacional)가 등장하고 있다. 다국민국가는 물리적인 영토 개념을 바탕으로 하는 국가 안에 단일한 국민이 존재한다는 정치적 개념과는 다른 문화적이고 공동체적인 국민을 주장한다.¹⁵⁾

넷째, 새로운 조직 형태와 조직 문화를 들 수 있다. 이것은 정당과 운동의 새로운 질속을 뜻한다. 원주민운동은 운동의 반(反)정당 근본주의와 정당의

15) 국민(nación)이라는 개념은 역사적으로 두 갈래로 형성되었다. 첫째는 국민과 국가가 일치하는 자유주의적 개념이다. 여기서 국민은 국가라는 지정학적 공간에 속하는 개인들의 총합이며, 국민국가(Estado-nación)라 불리는 근대적 국가가 여기에 해당한다. 두 번째 개념의 국민은 자유주의적 개념이 아니고 공동체적 개념의 국민이다. 공동체적 개념의 국민은 국가라는 지정학적 개념을 필연적으로 동반하지 않는다. 공동체적 국민은 자결(autodeterminación)의 개념을 수반하지만 그렇다고 독립(independencia)의 개념을 주장하지는 않는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다국민국가의 등장은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도 동일한 현상이기 때문에 라틴아메리카의 예외적인 현상은 아니다. 오히려, 아직 단언하기에는 이르지만, 문화적이고 공동체적인 다국민국가의 등장은 돌이킬 수 없는 역사적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 다만 다국민국가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과 합의가 없이는 국내외적 역학관계와 맞물려 내전(la guerra civil)으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현실에서 보고 있다.

반(反)운동 근본주의를 동시에 배격하면서 양자를 결합시키고 있다.

다섯째, 반자본주의 운동과 원주민의 전통적 세계관의 결합이다. 공동토지 제도에 대한 요구, 수(水)자원 민영화 반대투쟁 등은 공공재의 자본주의적 상품화에 대한 반대이면서 자연에 대한 원주민의 전통적 세계관의 표현이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예로는 안데스 원주민들의 빠차마마(Pachamama) 사상을 들 수 있다.

1980년대 초부터 원주민운동이 새로운 방향으로 활성화된 것은 위에 언급한 국내외적 변화를 배경으로 한다. 1984년에 조직된 ‘아마존 유역 원주민 조직 협의회’(Coordinadora de Organizaciones Indígenas de la Cuenca Amazónica, COICA)에는 페루, 볼리비아, 브라질, 에콰도르, 콜롬비아, 베네수엘라에 걸쳐 아마존 유역에 거주하는 원주민 단체들이 참여했고, 그 보다 조금 뒤에 페루의 뿌노(Puno)에서 ‘아이마라 공동체 국민연합’(Unión Nacional de Comunidades Aymaras, UNCA)이 조직되었다. 이 두 개의 조직은 국가 개념을 뛰어넘어 연합한 원주민 단체들이 폭력적 권력의 국가의 존재에 대해 공개적으로 토론을 거친 다음, 원주민 공동체 권력이 시급하게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결성되었다. 두 단체의 총회에서 집중적으로 거론된 의제들 중 영토적 자율성과 정치적 자율성은 새로운 원주민운동이 앞선 운동들과 확연히 구별되는 특징이다. 이때부터 국가와 원주민운동과의 긴장이 증가하기 시작했고, 원주민운동에 대한 국가의 압력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분리(segregación)든 동화(asimilación)든 혹은 통합(integración)이든 간에 원주민운동은 국가를 상대를 한 것이었지만 이때부터 원주민운동은 국가를 넘어서는 원주민 공동체의 자율을 주장한다는 점에서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원주민 공동체는 16세기 식민지 통치자들이 만든 것이었다. 원주민 공동체는 노예화되지 않은 인디오 주민들의 삶의 근거지였고 피난처였다. 따라서 독립 이후 공화국의 성립 과정에서 원주민들의 토지가 박탈되고 인디오들이 새로운 예속 상태가 되면서 원주민 공동체는 대농장주, 광산주 그리고 국가 권력에 대한 상징적 투쟁의 거점으로 선포되고 요구되었다. 또한 오랫동안 원주민 공동체는 정치적 민주주의가 실천되는 배타적 근거지였다. 왜냐하면 원주민 공동체에서는 14세 이상의 모든 남녀가 집단적 토론에 참여

하여 자신들의 문제를 논의하고 결정했기 때문이다.

V. 볼리비아 원주민운동

볼리비아는 인종적이고 지리적인 위치로 인해 안데스 지역의 국가들 중에서도 과두제 국가체제가 제일 오래까지 지속되었다. 유럽의 엔클로저 운동이나 앞에서 언급한 페루의 ‘출로화’ 현상은 농민이 도시노동자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역설적으로 사회변동을 유발하는 동기가 되었던 반면에, 볼리비아의 경우 이러한 동기가 부여되지 않았기 때문에 원주민-농민 상태로의 지배가 상대적으로 더 지속될 수 있었다.¹⁶⁾

볼리비아 농민들은 광부들의 사회운동에 동조하여 1940년대부터 조직되었다. 농민조합과 광부노조는 1952년 볼리비아 혁명에 참여하였고, 혁명의 결과 광산은 국유화되었고 대지주들의 토지를 농민들에게 분배했다. 전투적인 광산노동자와 농민들은 ‘볼리비아 노동자 동맹’(Confederación Obrera Boliviana, COB)과 연대하여 혁명을 공고하게 만들고 빅토르 빠스 에스텐소로(Victor Paz Estenssoro) 정권으로 하여금 토지 재분배를 합법화하고 확대하도록 만들었다. 그 뒤 광산노동자-농민연합은, 언제나 동일한 노선을 유지하지는 않았지만, 1964년 군부쿠데타에 의해 혁명운동이 붕괴될 때까지 볼리비아 정치적 굴곡의 한복판에 있었다.

라틴아메리카 원주민운동이 정치사회적 운동으로 부상한 것은 과두제 국가체제가 위기를 맞았던 시기지만, 더 극적인 사회운동으로 등장한 것은 신자유주의 공세 이후라고 할 수 있다. 1980년대 세계 주석시장이 붕괴되면서 정부가 운영하는 주석광산이 폐쇄되었고, 이 여파로 광산노동자들은 차파레(Chapare) 지역의 코카재배농민으로 변했다. 신자유주의 정책은 산업화가 거의 이루어지는 않은 볼리비아 사회를 완전히 붕괴시켰고, 농민들과 실직 광

16) 라틴아메리카 원주민들에 대한 지배는 두 가지 형태로 지속되었다. 하나는, 종족적 지배(dominación étnica)고, 다른 하나는, 계급적 지배(dominación de clase)다. 원주민-농민이라는 정체성은 두 가지 지배형태가 합쳐진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볼리비아의 경우 이 두 가지 형태의 지배가 더 오랫동안 지속되었다는 것이다(Gutiérrez y Escárzaga, 2006: 35-53).

산노동자들에게 코카는 유일한 환금성 작물이었다. 이 때문에 광산노동자들은 광산노조의 경험을 바탕으로 농민조합조직을 결성하여 새로운 원주민-농민운동을 부활시켰다. 농민조합은 코카와 코카인을 불법 거래하는 마피아 조직으로부터 농민들을 보호했고, 동시에 코카재배 이외에 수익사업이 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코카재배를 근절시키려는 볼리비아 정부와 미국에 맞설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세력이 강화된 농민조합은 다른 사회적 단체들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었고, 이후 사회주의 계열의 정치운동인 ‘사회주의운동’(Movimiento al Socialismo, MAS)으로 성장했다. 사실상, 볼리비아 원주민들은 스페인 식민지 지배 시기와 독립 이후(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차원에서는 여전히 식민지 상태였던) 공화국 시기에도 피지배자의 명예를 온전히 뒤집어쓰지 않았다. 수 세기에 걸쳐 많은 원주민 봉기와 폭동이 발생했지만 역사에는 제대로 기록되지 않았다. 이러한 저항 정신은 광산에서 일하는 원주민 광부의 시위와 과격 투쟁으로 이어졌고 진정한 저항조직으로 결성되었다. MAS의 출현을 가능하게 한 것도 1970년대 초의 아이마라 원주민들의 ‘각성’이었다. 이 시기에 맨 처음 등장한 아이마라 원주민 정당은 ‘뚜빡 까따리 혁명운동’(Movimiento Revolucionario Tupac Katari, MRTK)과 ‘뚜빡 까따리 원주민운동’(Movimiento Indígena Tupac Katari, MITKA)이었다. 두 운동은 모두 1780-82년에 일어났던 원주민 반란의 지도자였던 뚜빡 까따리(Tupac Katari)의 이름에서 연유했다. 이들은 원주민에 대한 경제적 착취, 문화적 억압 그리고 인종차별에 저항했고, 자신들의 전통과 문화 그리고 공동체적 민주주의와 자율을 요구했다.

까따리스마 운동은 ‘볼리비아 농민노동자 유일 노조동맹’(Confederación Sindical Única de Trabajadores Campesinos de Bolivia, CSUTCB)의 핵심이었고 1990년 말에 아이마라 원주민인 펠리페 끼스페 우앙까(Felipe Quispe Huanca)가 위원장이 되었다. 그는 현재 볼리비아의 부통령인 알바로 가르시아 리네라(Álvaro García Linera)가 이끌던 도시 좌파운동과 연합하여 쿠바 스타일의 무장투쟁 단체인 ‘붉은 아일루스’(Ayllus Rojo)를 결성했고, 이 단체는 나중에 ‘뚜빡 까따리 무장단체’(Ejército Guerrillero Tupac Katari, EGTK)로 발전했다. 그러나 무장단체는 금방 와해되었고 지도자들은 모두

투옥되었다. 출옥한 뒤 펠리페 기스빠는 ‘빠차꾸띠 원주민운동’(Movimiento Indígena Pachakuti, MIP)을 결성하고 아이마라 독립공화국을 주장했다(Petras & Veltmeyer, 2005: 175-190). 이러한 운동과 더불어 광범위한 아마존 지역에서 ‘볼리비아 동부, 차꼬, 아마존 원주민동맹’(Confederación Indígenas del Oriente, Chaco y Amazonia de Bolivia, CIDOB)이 조직되어 원주민들의 권리옹호와 보호를 위해 투쟁을 전개했다. MAS와 CSTUCB는 선거를 통해 정치권에도 진출했을 뿐만 아니라, 볼리비아의 천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광범위한 사회적·정치적인 운동을 전개하기도 했다. 그 좋은 예가 1991년의 ‘영토와 원주민의 존엄성을 위한 행진’(Marcha por el Territorio y la Dignidad)이었고, 최근에는 곤살로 산체스 데 로사다(Gonzalo Sánchez de Losada) 정권의 신자유주의 공세에 맞서 강력한 도로봉쇄와 가두투쟁의 방식을 통해 민중봉기로 맞섰다. 그 결과, 6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지만 산체스 정권이 권력에서 쫓겨났다.¹⁷⁾

1. 에보주의(Evismo)와 새로운 국민주의

2005년 대선에서 아이마라 원주민 출신이며 코카재배 농민이었던 에보 모랄레스(Evo Morales)가 대통령으로 선출된 것은 서방 언론들이 논평하듯이 단순히 좌파의 정치적 승리로 축소될 수 없는 중요한 사건이었다. 이것은 1992년 콜럼버스에 의해 아메리카 대륙이 ‘발견’된 것을 축하하는 축제에 맞서 대륙 전체에 걸쳐 “저항의 500년” 캠페인이 벌어졌던 것처럼, 인종차별주의를 토대로 한 식민주의에 대한 탈식민을 선언하는 정치적 사건이었다. 에보 모랄레스가 이런 역사적 사건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원주민운동에 변화가 필요함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즉 원주민운동을 주축으로 하되 국가 전체 구성원들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고 수평적 연대를 이루기 위한 새로운 대중운동을 조직한 것이다. 알바로 가르시아 리네라는 이러한 방식을 ‘에보주의’(Evismo)로 부른다.

17) 코차밤바 ‘물전쟁’(2000년)과 2003년 9-10월과 2005년 5-7월에 발생한 ‘가스전쟁’은 이 과정에서 발생한 중요한 사회정치적 사건이었다.

에보주의를 구성하는 첫 번째 중요한 요소는 사회운동을 근거로 한 권력투쟁 전략이다. 이것은 볼리비아의 정치적 역사에서 뿐만 아니라, 라틴아메리카 대륙과 세계 정치사에서 관찰되는 과거의 전략과의 단절이다. 과거의 하위주체운동의 전략은 사회운동을 발판으로 이용하는 정치적 전위조직의 방식이었다. [...] 에보주의는 이러한 방식을 수정해서 정치적 전위조직이 사회운동을 대표하지 않고 사회운동 자체가 스스로를 대표(*autorepresentación*)하도록 한다(García Linera, 2007: 2).

차빠레 지역의 코카재배 원주민-농민 운동은 1995년 ‘원주민 주권을 위한 기구’(Instrumento Por la Soberanía de los Pueblos, IPSP)의 설립으로 적극적인 실천 운동의 계기를 마련했다. IPSP 설립을 기점으로 농민 노조는 정부 기관에 실질적으로 압력을 행사했고 시장(市長)과 의회에도 진출했다. 다시 말해, 정치적 전위조직이나 대의정치에 자신들의 대표성을 맡기지 않고 직접적인 행동의 주체로 등장한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라틴아메리카 원주민-농민운동에 대한 네오맑시즘적 토론을 제기하는 중요한 변화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할 점은 사회운동의 대의성(*representatividad*)이 직접적 행위로 변화하게 된 것은 앞에서 언급한 권력의 식민성이라는 문제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가르시아 리네라가 에보주의의 또 다른 특징으로 언급하는 원주민의 현존과 정체성에 대한 문제이다. 즉 에보주의는 정체성이란 태생적 조건이나 불변적 조건이 아니라 만들어진 것임을 주장한다. 따라서 에보주의는 “정체성을 현대적으로 재구성하는 방식”이다(García Linera, 2007: 2). 이러한 주장을 안데스 지역의 원주민-농민사회운동과 관련시켜 부연한다면, 인종차별주의를 토대로 500년 동안 지속되어온 존재론적이고 인식론적인 유럽중심주의적 식민성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이며 비판이다.

이런 맥락에서 MAS의 주도하에 새롭게 재구성되고 있는 원주민 정체성은 유연성을 특징으로 한다. 고지대(*altiplano*)의 원주민 노조와 아이룰스의 강경하고 전투적인 노선을 계승하고, 이러한 노선을 저지대의 원주민 공동체의 타협적이고 온건한 노선과 절충을 시도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

면, 급진적인 아이마라 원주민주의는 원주민 정체성의 일부이며, 이러한 급진성이 정치적으로 집중되는 것은 원주민들 간의 갈등을 유발하는 배타성으로 작용할 수 있음에 주목하는 것이다.¹⁸⁾ 예보 모랄레스가 제안하는 원주민주의는 문화적이며, 이를 통해 볼리비아 사회를 파편화시키지 않고 모든 사회구성원들을 새로운 국가건설의 프로젝트에 참여시키려고 시도한다.

새로운 국민주의는, 앞에서 언급한 다국민국가와 동일한 개념으로, 1952년의 혁명적 국가주의와는 다르다. 혁명적 국가주의에서 국민국가를 촉진하고 통합하는 핵심이 ‘교육받은 중간계급’(clases medias letradas)이었다면 새로운 국가주의의 핵심은 원주민이기 때문이다. 1952년 혁명은 독립 이후 근대적 국민국가의 형성 과정에서 한 번도 정당한 의제로 등장하지 못했던 시민권(ciudadanía)에 대한 관심을 촉발시켰으나 과도제 국가를 운영했던 백인 엘리트 권력층의 헤게모니에 의해 규정된 메스티소 계층으로 축소되었다. 반세기가 지난 오늘날 원주민은 자율적인 정치적 주체로 등장했고, 확대된 새로운 국민주의의 모델의 제시를 통해 ‘다양성을 인정하는 단일성’(unidad en la diversidad)을 강조하는 다문화국민을 제안하고 있다. 예보주의가 제안하는 새로운 국민주의는 바르톨로메 데 라스 까사스(Bartolomé de Las Casas, 1474-1566)가 주장했던 평등논리가 원주민 스스로에 의해 라틴아메리카에서 처음으로 구체화된 ‘진정한 사회계약’으로 평가할 수 있다.¹⁹⁾

18) 볼리비아의 원주민 비율은 약 70%에 달하며 케추아(Quecha), 아이마라(Aymara), 과라니(Guarani), 치리구아노(Chiriguano)를 비롯해 약 36개 종족으로 이루어져 있다. 유럽의 ‘백인’에 대한 상대적 개념으로 ‘인디오’ 개념이 설정되면서 원주민을 구성하는 다양한 종족성도 한꺼번에 무시되었다. 부지불식간에 라틴아메리카가 문화적으로 동질성을 유지하는 단위로 인식되었듯이 원주민들 간에 존재하는 차이들도 무시된다.

19) ‘나시온 캄바 운동’(Movimiento Nación Camba)은 새로운 국민주의가 역사별적 인종주의라고 주장한다. 동부의 산따 크루스 주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나시온 캄바 운동은 예보 모랄레스 정부의 원주민주의가 인종차별적이고 배타적이며 당파성을 벗어나지 못한 ‘광적인 안데스주의’(Andinomanía)이며 좌파 민족주의라고 비판하면서 분리 독립을 시도하고 있다. 나시온 캄바 운동은 2000년에 땅 없는 원주민-농민들이 지지부진한 토지개혁에 항거하여 토지를 무단 점거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이를 막기 위한 지주들의 자위적 운동으로 시작되었고, 모랄레스 집권 이후 동부 네 개 주의 분리 독립운동의 구심점으로 변화하고 있다. 예보주의가 목표로 하는 새로운 국민주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비판까지도 수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원주민운동이 미학적 차원의 차이를 인정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정치적 투쟁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나시온 캄바 운동이 주장하는 인종적 역차별은 현시점에서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

사회계약으로서의 다국민국가는 법적인 토대 위에서만 가능하다는 전제에서 ‘다국민적 제헌주의’(constitucionalismo plurinacional)를 통해 구체화되고 있다. 법률적인 면에서 국가라는 통합적 체계를 유지하면서도 문화적 획일성이 아닌 차이를 인정하는 다국민적 제헌주의가 근대적 제헌주의와 다른 점은 ‘동시성’(simultaneidad)과 ‘동시대성’(contemporaneidad)을 동일하게 보는 시각이다. 이와 달리 서구 근대성은 동시성과 동시대성을 갈라놓았다. 동시성이 공간적 인식론이라면 동시대성은 시간적 인식론이며, 특히 직선적 시간에 바탕을 둔 인식론이다. 직선적 시간 개념 위에 세워진 동시대성은 진보라는 개념을 내세워 앞선 것과 뒤쳐진 것의 자리를 할당한다. 따라서 동시대성의 관점에서 차이는 만나고 섞이는 무엇이 아니라, 부정되어야 할 무엇이다. 아이마라 원주민-농민이 세계은행의 관리와 마주친다고 가정한다면, 그들은 같은 공간에 있다는 점에서 동시성을 유지하지만 동시대인은 아니다.²⁰⁾ 이런 의미에서 다국민적 제헌주의는 다양한 공동체가 자기 방식대로 동시대성을 유지한다는 것을 인정하려는 시도다. 국민이라는 것은 획일적 동일성에 의한 합의를 통해서가 아니라, 차이에 대한 인정을 통한 합의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2. 자원국민주의와 ‘안데스-아마존 자본주의’(capitalismo andino-amazónico)

새로운 국민주의는 두 가지 측면에서 경제적 토대를 세우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첫째, 천연자원의 회복이며, 특히 탄화수소의 국유화이다. 탄화수소의 국유화는 자본주의의 원리를 근본적으로 무시하는 민족주의나 보호주의가 아니라, 식민주의의 종결을 뜻한다.²¹⁾ 둘째, 소기업, 영세기업, 수공업,

20) 미놀로는 이러한 차이를 ‘식민지적 차이’(colonial difference)로 명명한다. ‘차이’는 근대성이 강요하는 동일화를 거부하는 탈근대적 가치로 등장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근대성 내부의 미학적 차이를 뜻할 뿐이고, ‘문명화’와 ‘계몽’의 깃발 아래서 ‘식민지적 차이’는 부정되어야 할 무엇일 뿐이었다. 다시 말해, 식민지적 차이는 근대성이 내세우는 동일성에 의해 계몽되고 복속되고 포섭되어야 할 대상일 뿐이다.

21) 2006년 5월 1일 에보 모랄레스는 탄화수소 자원을 국유화했다. 좌파 진영에 속하는 비판가들은 “약한”(blando) 수준의 국유화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예측했으나, 에보 모랄레스는 “강한”(duro) 수준의 조치를 취했다. 그는 유전지역에 군대를 파견하고 탄화수소의 거래를

원주민-농민 공동체에 대한 지원이다. 가속화되는 세계화의 현실에서 거대 다국적 기업의 진출을 거부하지 않으면서도 에보주의가 내세우는 볼리비아 경제의 버팀목은 개인, 가족, 공동체를 바탕으로 하는 소규모 생산체제다. 거대외국기업과 농민과 원주민 공동체의 영세기업과의 격차는 탄화수소의 국유화를 이루지 않고는 연대와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전통적인 안데스 공동체 사회주의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정확히 말하면, 안데스 공동체 사회주의는 국가독점 자본주의였던 과거의 사회주의와는 구별되는 것으로 원주민주의, 민중국민주의, 노조주의, 맑시즘이 혼합된 공동체주의다.²²⁾ 모랄레스 정부는 신자유주의를 옹호하는 반대파들처럼 사유재산과 자본주의 국가기구를 존중한다. 외국인의 투자를 장려하고 법적인 보호를 약속하며 다국적 기업의 활동도 보장한다. 탄화수소의 국유화 역시 징발(expropiación)이 아니라 책임 있는 국유화의 절차를 통해 이루어졌다. 자원국민주의는, 알바로 가르시아 리네라의 말을 빌려 이데올로기적으로 표현하면, ‘안데스-아마존 자본주의’를 통해 나라를 산업화시키는 것이며, 이를 발판으로 안데스-아마존 부르주아지를 육성하고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안데스-아마존 부르주아지는 중간 계층, 가난한 농부, 도시의 소상인, 원주민 공동체로 구성되는 이질적 집단이다.

모랄레스는 국가, 지역의 중소기업과 대기업 그리고 초국적 기업을 연결하는 사회를 제안하고 있다. 새로운 발전의 기반은 상호보완적인 세 축의 연결로 구축될 수 있다고 말한다. 1952년 혁명을 주도한 ‘민족주의혁명운동당’(Movimiento Nacional Revolucionario, MNR)은 계급연대에서 외국자본을 배제했으나 MAS는 외국자본을 끌어안으려고 한다. 이러한 시도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중요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외국자본을 배제하지 않고도 모

국가가 통제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격렬했던 파라과이와의 전쟁(1932-1935)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차코의 영웅”(Héroes del Chaco)으로 명명된 국유화 법령은 탄화수소의 소유권을 국가로 이양하고 법령이 발효되는 시점부터 생산과 판매를 볼리비아 국영석유회사(Yacimientos Petrolíferos Fiscales Bolivianos, YPFB)가 담당할 것이며, 이를 통해 국내의 석유 판매량과 가격을 정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2) 안데스 공동체 사회주의의 복합적인 성격은 MAS가 내세운 비전에 잘 드러나 있다. “통합되고, 다국민적이며, 코문주의적인 국가와 선주민들, 원주민들 그리고 농민들의 자결을 위하여. 새로운 볼리비아를 위한 비전-MAS, 2007년 5월 8일.” <http://www.zmag.org/content/showarticle.cfm?SectionID=52&ItemID=13081>

랄레스 정부가 추진하는 ‘안데스-아마존 자본주의’가 성공할 수 있을까? 기득권층과 외국자본에 손해를 끼치지 않고 빈곤층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은 과거의 민중주의자들이 저질렀던 오류와 동일한 것이 아닌가? 국가경제를 위한 자본의 축적의 시도가 과두정치 지배자들에게 종속되어 있는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20세기 볼리비아 역사를 되풀이하는 것은 아닐까?

모랄레스 개혁이 직면해 있는 이러한 난제들은 동서로 갈라진 볼리비아의 상황을 고려할 때 손쉬운 해답을 낙관할 수 없다. 석유와 천연가스 매장량이 집중되어 있는 동부 지역의 4개 주(산따끄루스, 파리하, 베니, 뻬도)는 중앙정부로부터 분리 독립을 선언하고 있고, 제헌의회를 통한 개혁을 저지하기 위해서 개헌을 위한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법적 근거를 들어 의회를 보이콧함으로써 제헌의회를 마비시키는 전략을 쓰고 있기 때문이다.

VI. 원주민 국민주의에 대한 전망—결론을 대신하여

모랄레스 정권의 개혁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물질적 조건을 해결해야 한다. 즉 소규모 경제단위의 재생산이 가능한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를 재구성하는 관점에서 생기는 중요한 모순은 제헌의회 통제권을 통해 국가를 개혁하고자 하는 모랄레스 정부와 과거의 지배를 재건하려는 과두세력 간의 권력투쟁이다. 보수적 과두세력은 지방의 분권 권력을 통해 개혁을 저지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러한 투쟁을 해결하기 위해 가능한 방법 중의 하나는 과두세력, 과두세력과 연대하는 제국주의 그리고 원주민 정권 사이에 새로운 사회계약을 정착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사회계약은 자본주의의 기본적 구조(사유재산의 보호, 투자장려, 법적 안정성 제공 등) 뿐만 아니라, 신자유주의 강령(거시경제의 안정성 유지, 재정적자의 조절, 노동유연성, 인플레이션 예방, 개방경제 등)에서도 벗어날 수 없는 여건에서 제국주의와 내적 식민주의 권력을 견제하기 어려운 위험성에 노출될 수 있다. 제헌의회를 통해 제헌헌법을 제정하려는 시도는 이러한 위

협에 대한 최소한 법적 조치가 될 것이다. 또 다른 대안은 지속적 개혁을 위해 정치권력 외부에서 사회운동 세력이 끊임없이 압력을 가하는 것이다. 이러한 압력 행사는 무토지농민운동(MST)이나 알또(El Alto)의 민중조직이 주장하는 ‘배상 없는 국유화’(nacionalización sin indemnización) 주장에서 현실화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원주민 국민주의는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옛 것’과 아직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새 것’ 사이에서 투쟁하고 있다.

볼리비아 원주민운동은, 일반적으로 원주민운동이 그렇듯이, 평등을 위한 정치적 투쟁이면서 차이에 대한 인정을 요구하는 문화적 투쟁이다. 원주민 노동자 출신인 에보 모랄레스가 대통령으로 선출됨으로써 정치적 투쟁을 통해 평등을 확보했다는 점에서는 일정 부분 성공을 거두었다. 그러나 추상적 동일성과 총체성으로 환원되지 않는 문화적 차이를 요구하는 투쟁은 정치적 투쟁을 넘어서는 또 다른 차원의 투쟁이다.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통합이 보편주의의 신화라면, 통합을 전제하지 않는 차이에 대한 주장은 문화적 상대주의에 빠질 위험이 많다. 문제는 차이에 대한 인정을 전제로 통합을 모색하는 것이다. 볼리비아에서 추진되는 다국민국은 존재론적-인식론적 차별을 전제하는 식민지적 차이를 극복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시도는 어렵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서구 근대적 국민국가 틀에서 발생하는 난제들에 새로운 해답을 던져주는 실마리가 될 수 있다. 고립된 내륙국가로서 라틴아메리카 역사에서도 주변화되어 있었던 볼리비아의 상황을 눈여겨보아야 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참고문헌

- 김기현. 2005. 「라틴아메리카 원주민 인권: 문화적 다양성의 지향」. 《라틴아메리카연구》, 18(3): 85-119.
- 김은중. 2006. 「라틴아메리카 좌파정권과 대안사회운동」. 《역사비평》, 76(가을): 239-269.
- _____. 1999. 「호세 바스콘셀로스: 문화적 민족주의와 신인간」. 이성형(편). 『라틴아메리카의 역사와 사상』. 서울: 까치. 220-242.
- 로버트 J. C. 영. 2005. 『포스트식민주의 또는 트리컨티넨탈리즘』, 김택현 옮김. 서울: 박종철출판사.
- 박정훈. 2007.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8(2007.1.15) lemonde@lemonde.co.kr
- 백승욱. 2006. 『자본주의 역사 강의: 세계체계 분석으로 본 자본주의의 기원과 미래』. 서울: 그린비.
- 부사령관 마르크스. 2002. 『우리의 말이 우리의 무기입니다』. 서울: 해냄.
- 우석균. 2007. 『내 안의 다양한 우리: 페루 안테스와 인권』. 《라틴아메리카연구》, 20(1): 135-162.
- 이성형. 1999. 「라스 카사스: 정의를 향한 투쟁」. 이성형(편). 『라틴아메리카의 역사와 사상』 서울: 까치. 75-97.
- 조정환. 2002. 『21세기 스파르타쿠스: 좌파운동에서 자율운동으로』. 서울: 갈무리.
- Cuba Rojas, L. Pablo. 2006. “Bolivia: movimientos sociales, nacionalización y Asamblea Constituyente.” *Observatoria Social de América Latina*, VII(19). Buenos Aires: CLACSO. 55-64.
- Dussel, Enrique. 2000. “Europa, modernidad y eurocentrismo.” *La colonialidad del saber eurocentrismo y ciencias sociales. Perspectivas Latinoamericanas*. Edgardo Lander(comp.). Buenos Aires: UNESCO-CLACSO. 2007년 5월 30일 검색. <http://bibliotecavirtual.clacso.org.ar/ar/libros/lander/dussel.rtf>
- García Canclini, Néstor. 2002. *Latinoamericanos buscando lugar en este siglo*. Buenos Aires: Paidós.
- García Linera, Álvaro. 2006. “El evismo: lo nacionalpopular en acción.” *Observatoria Social de América Latina*. VII(19). Buenos Aires: CLACSO.
- _____. Álvaro. 2007. “Democracia liberal versus democracia comunitaria”. *El juguete rabioso* La Paz. 3(96), 20 de enero.
- Gutiérrez Raquel y Escárzaga, Fabiola (coord.). 2006. *Movimientos indígena en América Latina: resistencia y proyecto alternativo vol. II*, México: Centro de Estudios Andinos y Mesoamericanos.
- Mignolo, Walter D. 2000. “La colonialidad a lo largo y a lo ancho: el hemisferio occidental en el horizonte colonial de la modernidad.” in Edgardo Lander (comp.). *La colonialidad del saber eurocentrismo y ciencias sociales. Perspectivas Latinoamericanas*. Buenos Aires: UNESCO-CLACSO. 2007년 5

- 월 30일 검색. <http://bibliotecavirtual.clacso.org.ar/ar/libros/lander/mignolo.rtf>
- Morales, Evo. 2006. “Discurso inaugural presidencial.” 2007년 11월 30일 검색. <http://www.Bolivia-usa.org>.
- Orellana Aillón, Lorgio. 2006. “Hacia una caracterización del gobierno de Evo Morales.” *Observatoria Social de América Latina*, año VII(19). Buenos Aires: CLACSO. 45-54.
- Paz, Octavio. 1984. “La democracia en América Latina.” in Enrique Krause (comp.). *América Latina: desventuras de la democracia*. México: Joaquín Mortiz. 11-32
- Petras, James and Veltmeyer, Henry. 2005. *Social Movements and State Power: Argentina, Brazil, Bolivia, Ecuador*, London: Pluto Press.
- Rudel, Christian. 2007. “Bolivia: From colonialism to Indianism.” 2007년 11월 28일 검색. <http://www.zmag.org/content/showarticle.cfm?SectionID=52&ItemID=12816>
- Quijano, Aníbal. 2000. “Colonialidad del poder, eurocentrismo y América Latina.” in Edgardo Lander(comp.). *Colonialidad del saber, eurocentrismo y ciencias sociales*, Buenos Aires, UNESCO-CLACSO. 2007년 5월 30일 검색. <http://bibliotecavirtual.clacso.org.ar/ar/libros/lander/quijano.rtf>
- _____. 2004. “El laberinto de América Latina: ¿Hay otras salidas?” *Revista Tareas*, 116(enero-abril). Panamá: Centro de Estudios Latinoamericanos, Justo Arosemena. 45-74.
- _____. 2005. “El movimiento indígena y las cuestiones pendientes en América Latina.” *Revista Tareas*, 119(enero-abril), Centro de Estudios Latinoamericanos, Justo Arosemena, Panamá. 31-62.
- Souza Santos, Boaventura de. 2000. *Crítica de la razón indolente: Contra el desperdicio de la experiencia*. 2008년 1월 10일 검색. http://www.ces.fe.uc.pt/bss/documentos/critica_de_la_razon_indolente.pdf
- _____. 2007. “La invención del Estado y el Estado plurinacional.” *Observatoria Social de América Latina*, VIII(22). Buenos Aires: CLACSO. 25-46.
- Stegfanoni, Pablo. 2007. “On the verge of a racial revenge.” 2008년 1월 15일 검색. <http://www.zmag.org/content/showarticle.cfm?SectionID=52&ItemID=13143>.

성명: 김은중(Kim, Eun-Joong)
주소: 강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E-mail: ocpaz@hanmail.net

논문접수일: 2008년 3월 19일
심사완료일: 2008년 3월 30일
게재확정일: 2008년 4월 3일